

'돌고래 외교' 강조 나선 이낙연 전 총리

“현 정부 북중일 관계 안보여”

(윤석열 정부)

부산시의회서 '대한민국 생존전략' 북콘서트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친 외교에 대해 '우리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도덕성"'

29일 오후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서 강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부산을 찾아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북 콘서트를 열었다.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북 콘서트에는 박영순(대전 대덕구), 양기대(경기 광명), 최인호(부산 사하갑), 윤영찬(경기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배재정 사상구 지역위원장, 박성현 동래구 지역위원장, 서은숙 부산사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 대회의실에는 지지자들이 약 400명이 몰려 준비된 의자가 모자라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낙연 파이팅"을 외치고 환호했다.

북 콘서트는 외교와 관련한 강연에 이어 국내 정치, 유학 생활, 인생 노하우 등의 질문을 청년들과 시민들로부터 받고 답하면서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외교에 있어서 '돌고래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2마리의 큰 고래가 헤엄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물고기'로 고래한테 먹힐 것인가, 아니면 귀엽지만 강하고 매력적인 돌고래가 돼 외교를 펼칠 것인가 갈릴갈릴 서 있다"며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외교에 있어서 4가지 운영을 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인 점, 미국과의 동맹, 반도 국가, 통상 국가라는 특

징이 있다"며 "우리를 둘러싼 4개의 강대국 속에서 미국 동맹을 가운데 두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 전략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두바이에 가서 이란이 적이라고 말했으면 안 됐다"며 "우리는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상인의 입장에서 누구라도 손님이 될 수 있게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과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워서도 안 되고 손님과 손님 사이에 싸움을 붙여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를 보면, 민주당 정부는 분단을 강조하면서 평화의 방점을 두기도 하고, 보수는 동맹을 강조하기도 한다"며 "단지, 너무 한 가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너무 미국과의 동맹에만 목을 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일본의 '충중 외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앞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지만 뒤에서는 전 총리 등을 기용해 중국에 경제협력을 촉구해 협력한다"며 "반면 우리는 단중 외교라고 불릴 정도로 한쪽을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한미 동맹은 운명이기 때문에 가운데 두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도 노력하는 정부가 돼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북콘서트를 갖고 있다.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 당시 가장 외교적으로 안정된 시기라고 보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2의 DMG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북 콘서트 이후 서지연 부산시의원과 천병준 동래구 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재 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전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국민이 필요하지만 부족하다"며 "과하게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갈리는 만큼, 안전과 인심이 같지 않기 때문에, 비뚤음의 흐름이나 수산물에 유통 과정 등 단계 단계마다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된 질문에 이 전 대표는 "현 정부는 대북, 대중

대러 정책이 없다"며 "한미일 공조가 단단해질수록 뒤에서는 북중러의 공조도 단단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MZ 세대의 북한 및 통일 피로도도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전 대표는 "미국도 MZ 세대에서 북한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데,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하지만, 통일은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남북통일과 관련한 부분이 4곳이 등장하는 등 청년층에 고통스럽겠지만 설명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덕성'이다"며 "우리 정당은 수십 년 동안 이런 믿음을 자신으로 삼고 살아왔다. 국정 경험이 많지만 그래도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도덕성과 경제적 도덕성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당 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의사결정인 기구인 전당대회에서 부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치적 도덕성에 심하게 타격을 받았다"며 "민주당 사담들이 문에 더 깨끗하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래서 더 정직하다고 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 중의 수억 원을 부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빨리 털어내고 아프지만 우리 이미지를 세척하는 것처럼 빨아내는 것이 중요하네, 자꾸 안 빨아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 콘서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 전 대표는 "지금 정부는 너무 차갑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하기만 하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전북 전주시 전주대 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뉴시스

전북 경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 채택

도의회 인사청문위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25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가 추가자료 제출 거부,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투기성이 의심되는 점, 기부 및 사회적인 봉사 활동이 미비한 점은 도덕성 및 공직 후보자로서 자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해외 시장 개척 및 국내의 판로 개척에 전문성을 갖췄고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유치 지원에 적임자로 판단, 경진원 원장 후보자 자격에 적합하다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운영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질책과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공부 되는 인사청문회였으며,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하고,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인권 위원장은 "전북은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후보자께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 될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해결을 위해 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장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회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종오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동료의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유치

특위, 국회 찾아 현안 건의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의원들(강인식, 이기열, 김정현)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관계없이 기존의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국립의전원 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이날 시 의원들은 국립의전원 법률안 발의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김성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보건복지위 최연숙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관련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강인식 위원장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공공의료의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교육감 무죄

재판부 "동료교수 폭행 주장 진술 신빙성 낮아"

공판중심주의 원칙, 반복 진술 일관성 작용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과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13년에 있었던 전북대 교수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다. 당시 전북대 총장선거를 준비 중이었던 이규재 교수는 총장 출마를 반대하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폭행 피해자 주장한 이규재 교수의 진술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규재 교수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도 서 교육감의 폭행여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규재 교수의 진술번복에 대해 총장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었고 서 교육감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에 당선이 되자 총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규재 교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 번복된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없고 당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수사기관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중요한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검찰조사와 법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된 점, 사건이 발생한 뒤 동료교수들과의 대응을 논의하면서도 전북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점, 병원치료를 사건 발생 5일 뒤 받았고 그 시간동안 다른 이유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진단서에 '폭행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적혀있으나 이규재 교수의 주관적인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점,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서 교육감이 피해 이규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규재 교수의 최초 경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규재 교수의 1·2회 경찰조사에서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며 "회식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폭행사실을 목격하는 사실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피고인'이 이규재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이규재 교수의 뺨을 때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무죄선고 후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애를 써주시는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했으나 거짓된 말로 인해 비롯됐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여가부 장관·여당 불참

국회 여가위 끝내 파행

멤버리 파행 사태 관련 현안질의 위해 예정

야당 의원들, 국회 경내 김현숙 수색 나서기도

2023 새민중 세계스카우트 멤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현안질을 위해 지난 25일 예정했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과 여당 불참으로 끝내 파행됐다.

야당은 김현숙 장관이 불참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사퇴 요구와 함께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의 출석을 공식 요구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면서 불출석 시 형사 고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가부 등 유관부처를 상대로 멤버리 대회 파행 사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가부 전날까지도 증인 출석 명단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은 불참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회의를 열겠다던 입장이었다. 이날 오전 9시 개의시간을 넘기고도 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회 경내 대기 중인 김 장관을 찾기 위한 추격전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장관 측에 출석을 요구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화장실에 있던 여가부 대변인에 몰려가 김 장관의 현 위치를 따져 물었다. 이어 여가위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 5층에서 국무위원 대기실이 있는 3층까지 이동하며 김 장관 소재 파악에 시간을 쏟았다.

야당 의원들은 결국 김 장관을 만나지 못했고, 회의는 오전 9시36분께 반쪽 개회했다. 야당은 이날 회의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열린 것임을 강조하며 정

부·여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권인숙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법률안과 여가부 소관 결산, 멤버리 부실 관련 보고 및 현안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며 "이제 합의된 공적일정이고 보고서까지 다 제출된 상황임에도 여가부 출석 대상자와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만이 고조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 대한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 장관 출석의 건을 상정해 처리, 출석요구를 발표했다.

다만 김한규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7일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만 불출석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오늘은) 불출석 가능성이 있어 다음 위원회 일정을 잡고 출석요구를 7일 전에 명확하게 한 다음 불출석하면 형사고발해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김 의원 재언을 받아들여 이미 가결된 출석요구서 발부와 7일 이전 출석요구 후 불출석 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출석 통보서를 전달받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 장관 출석을 기다리며 정회했던 회의는 속개 후 곧 산회했다.

이날 회의가 파행하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예정했던 안건들은 상정조차 안 됐다. /뉴시스